

경찰이 엄해지고 있다

불법 시위 전기충격기 사용 등 잇단 강력 대책 새정부 '법질서 확립' 천명 코드 맞추기 비판도

'법질서 확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경미한 불법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도 엄벌주의를 천명하는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 질서 확립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로 각종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홍보·계도 활동 등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광주청과 전남청은 지난달 28일 유관기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을 동원해 대규모 법·도민 결의대회를 하고 각 경찰서별로 릴레이식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각 경찰서·지구대별로는 '보여주기식'의 갖가지 법질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쏟아내고 있다. 또 시·도 경찰청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도 준비 중이다. 시·도 단위 치안관련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경미한 불법·폭력 시위 단순 참가자 등에 대해 훈방조치 대신 즉결심판 청구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데다,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 참가자를 적극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권총형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 내근 인력 10%를 차인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민원실 근무 인원을 일괄 축소해 민원 공백이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서 민원이나 증빙서류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대국민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인원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새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최근 경찰의 일련의 행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집행에 있어 더욱 강경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

적 이슈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기 보다는 옹화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흥농민회와 전교조 장흥지회·장흥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이 법질서 확립 권기대회를 하면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을 줄 세우고 법질서 훈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청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없다. 단지 법 질서를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우병 쇠고기 퇴치 퍼포먼스

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일민가족 선언'을 한 뒤 퍼포먼스를 가졌다.

사단법인 빛고를 생협은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일민가족 선언'을 한 뒤 퍼포먼스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15개 시·군 응급전문의 없다

전국 40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조차 全無

전남지역에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시·군이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가운데 시 지역 28곳과 군 지역 65곳에는 응급환자 진료료 전문으로 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각각 15개 시·군에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충북과 함께 응급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분류됐다. 각 시도별 응급의학전문의 배치 인원은 서울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100명, 광주 27명, 인천 25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문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조차 없는 시·군도 40개가 넘는 정도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국내에 배출된 응급의학 전문의는 540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체류자 등을 제외하고 505명이 응급 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응급의학

회 관계자는 "전국 120개 응급의료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약 700~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가 있는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응급의학전문의 수 자체가 적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응급의학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응급의학 기피현상이 심해 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자동차 바퀴 도둑 '조심'

영암 아파트 주차장 도난 잇따라

영암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이모(35)씨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타이어와 휠 4개가 통째로 없어졌다.

같은 날 409동 주차장에서도

윤모(34)씨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타이어와 휠 4개가 없어지는 등 인근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모두 4대의 바퀴가 도난당했다.

경찰은 절도범이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짝을 이용해 타이어를 통째로 뜯어 훔쳐간 것으로 보고 신원파악을 위해 아파트 CCTV를 분석하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성매매 출장마사지 조직 적발

2명 구속·6명 입건

광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마사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4일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39)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전단지 제작한 인쇄업자 윤모(여·32)씨와 전단지를 배부한 정모(28)·성매매 여성 권모(22)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

월 20일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시내 주택가·유혹가 등의 주차차량 등에 명함크기의 출장 마사지 광고전단을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해 1차례에 13만원씩, 총 7천300여 차례에 걸쳐 5억3천여만 원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원룸에 콜센터까지 설치해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매월 6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적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

"수사기록 열람 거부 구체적 이유 밝혀야"

경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때는 각 서류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검사를 상대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을 4일 각하했으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시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A씨에 대한 선고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람·등사 거부시 정정화된 서식에 개괄적으로 불허가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연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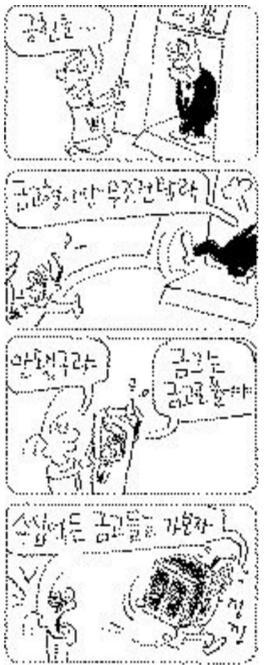
김정민 前 여수시의장 '대리시험' 집유 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4일 대리시험을 통해 검정고시를 통과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으로서 대리시험을 통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나원침 (7449) 김장동



다 좋은 건데...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질린 나무 전봇대 덮쳐 정전 불편

○광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택시 조성을 위해 자르던 나무가 전봇대를 덮치면서 인근 40여 가구와 초등학교가 15분 동안 정전.

○4일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8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절단 중인 메타세쿼이아 나무(높이 20m)가 전선과 전봇대(높이 16m)로 넘어진 것.

○이 사고로 인해 인근 S초등학교와 주택 40여 가구에 15분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

○한전 관계자는 "복구팀이 긴급 출동 해 복구했지만, 피해액이 700만~8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아파트 건설사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